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에서 4번째), 구자용 E1 회장(왼쪽에서 5번째)과 양사 관계자들이 신규사업 공동추진 및 협력을 위한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서발전

동서발전-E1, 수도권 집단에너지사업 개발

신규사업 공동추진·협력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4일 울산 본사에서 E1과 신규사업 공동추진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여수그린 집단에너지사업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양사가 이어온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수도권 신규 집단에너지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신규 집단에너지사업 공동개발 및 건설·운영 ▲기타 발전사업 기회 발굴 협력 ▲사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 집단에너지사업 개발 과정에서 양사의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결합해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1은 평택에서 열병합발전사업을 운영 중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업 기반을 보유한 종합 에너지기업이다. 동서발전은 공기업으로서의 안정적 사업 기반과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양사의 운영 노하우와 재무·사업 역량이 결합될 경우 수도권 집단에너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세종=한용수 기자

귀농·귀촌가구 72% “농촌 생활 만족”

농식품부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 5년차 평균소득, 전체농가 65%

귀농·귀촌 가구 70% 이상이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귀농 5년 차의 평균 소득은 전체 농가 평균소득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귀농 유형은 농촌 출생 후 도시 생활을 거쳐 연구지 농촌으로 돌아가는 U자형이 73.0%로 가장 많았다. 귀촌의 경우, 도시 출생자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I자형이 48.7%로 많았다.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귀농가구의 71.9%, 귀촌가구의 72.0%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다는 응답도

귀농가구 75.5%, 귀촌가구 54.5%로 집계됐다. 또 귀농가구의 97.0%, 귀촌가구의 86.3%가 현재의 거주지에 계속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귀농 이유로는 자연환경(33.3%), 기업승계(21.7%),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13.5%) 등을 꼽았다.

소득은 해가 바뀔수록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귀농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첫째 2534만 원에서 5년 차 3300만 원으로 30.2% 늘었고, 귀촌가구는 3853만 원에서 4215만 원으로 9.4% 늘었다.

다만 귀농 5년 차 평균소득은 전체 농가 평균소득인 5060만 원의 65.2%에 머물렀다. 귀농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은 경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영농 경력도 짧기 때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가축질병에 드론·광역살포기 투입

농기계은행 보유 방제자원 활용

농협은 최근 가축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계은행사업용 드론과 광역살포기를 방역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에 대한 대응이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임직원은 지난 19일 전북 익산 관내 농협이 운영하는 광역방제기와 드론을 동원해 경기 평택 일대의 축사 주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임규원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장은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기계은행이 보유한 방제 자원까지 활용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해 운전자를 채용,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책임운영 방식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247개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무인헬기 171대 ▲드론 770대 ▲광역살포기 76대 등 총 1017대의 첨단 방제 장비를 운용 중이다.

이들 장비를 활용한 작년 방제 작업 규모는 총 48만1000헥타르(ha)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농번기 적기방제를 통해 농가의 인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병해충 및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에너지 전환 1호’ 가동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돌입

석탄화력 → 천연가스 복합화력
정부 탈탄소 전략 맞춘 첫 연료전환
구미시 전력 자립률, 환경성 개선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첫 석탄화력 대체 연료전환 사업인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에 따른 ‘에너지 전환 1호’ 사업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향후 석탄화력 대체 프로젝트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석탄화력인 태안 1호기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복합화력으로 전환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정부의 탈탄소 전략에 발맞춰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 복합발전으로 대체하는 첫 연료전환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2022년 12월 착공 이후 약 38개월간의 공사를 거친 발전소는 2024년 11월 최초 수전, 2025년 9월 가스터빈 최초 점화, 2025년 12월 스팀터빈 발전 개시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240시간 연속 자동운전시험을 통과하며 상업운전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기념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구미천연가스 발전소 전경. /서부발전

설비용량은 500메가와트(MW) 규모로, 구미시 전력 자립률을 기존 6% 수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전력 수요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성도 대폭 개선됐다. 최신 저질소산화물(NOx) 연소기와 환경설비를 적용해 배출가스를 법적 기준치보다 크게 낮췄다. 건설 기간 중 약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부발전은 경북 철곡 북삼에서 구미까지 21.5km에 달하는 장거리 천

연가스 배관망을 한국가스공사와 공동 구축했다. 이를 통해 건설 투자비와 운영·유지보수비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 중부투자를 방지했다. 해당 사례는 2024년 정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남은 건설 일정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공정위, 산업안전 비용전가 건설사 4곳 확인

하도급법위반 혐의 심사보고서 송부
원사업자 부담 비용·책임 전가 우려
경쟁입찰 과정서 위반행위 적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 4개 건설사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업체별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이하 피심인들)의 하도급법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장비 반입 이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 ▲추락·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내용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약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용 또는 책임 부담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민원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금 지급을 일체 불가하도록 한 특약(엔씨건설) 등도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으로 봤다.

기타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 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법정 기한(공사 착공 전)을 넘겨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들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 등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결을 제시했다.

부당특약 설정은 하도급대금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위반금액 산정

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범위에서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뒤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2025년 들어 건설현장에서 4건의 산업재해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도 접수되면서 지난해 8월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내용을 59개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구술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토대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의 산업안전 책임·비용 전가 관행을 시정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